

20분 갈 거리가 1시간...광주는 출근길 교통대란

지하철 공사에 개학 겹치고 교통량 늘어 혼잡...시민들 불편 호소 가치치기작업에 혼잡 가중 '분통' ...엔데믹 시대 교통대책 마련해야

“평소에 2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이나 걸리네요. 딱 막힌 도로에 아침마다 지각 걱정에 속이 답니다.”

광주 도심에서 출근길 교통지옥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해제로 인한 대면업무 일상화에 개학까지 겹치면서 매일 아침 광주 도심에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침마다 지각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은 도시철도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오전 8시~9시) 광주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 유촌동의 계수교차로이고, 광산구 수완동 산월IC와 북구 동림동 우석교차로 순이다.

이외에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광주시 교통정보를 보면 출근시간대에는 광주 도심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눈에 띄게 막히는 구간은 동구 학동 남광주 교차로 방향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과 서구 풍암동 염주체육관 방향·월드컵 경기장·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삼거리,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와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 광산구 운수동 광주경찰청 방향 무진대로 등이다.

일부 구역은 예전부터 막혔던 구간이지만 대부분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공사가 출근길 교통정체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6개 구간 등지에서 4차선이던 도로가 1차선으로 축소되거나 도로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지기도 해

시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특히 풍금사거리의 경우 지하철 공사 현장 바로 옆에서 시내버스 승객들이 무질서하게 승·하차 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별다른 신호수나 안전 관리원이 없었으며 좁아진 차선에서 승하차를 진행하는 버스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자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매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남구정에서 2분 거리에 사는 이승언(33)씨는 “백운광장을 통해 출근하면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걸려 지각했던 게 한 두번이 아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직장인 나지우(여·26)씨도 “출퇴근 시 무조건 상무지구를 지나야 하는 데 지하철 공사로 인해 매일 같이 차선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며 “지하철 공사로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아침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울상을 지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매달 관계자들이 모여 교통처리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데믹 전환으로 대면업무가 본격화 돼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대거 차를 몰고 출근을 하게 된 점과 재택수업을 받던 학생들도 대면수업으로 변경된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윤춘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출근길이 밀리는 이유는 광주의 경우 지하철 2호선 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새학기의 시작과 봄철 날씨객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겹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1일 ‘광양교 입구’ 정류장에서 ‘송정98번’을 타고 이동해보니 오전 7시 30분께 버스 이용객은 교복을 입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대다수였으며 오전 8시가 지나자 더는 승객을 태우지 못할 만큼 버스가 가득 찼고 이에 정류장을 지나치는 상황도 발생했다.

올해 1월 광주지역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1월 대비 72만여명 증가했고, 2월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5만여명 늘었다.

방학기간(1월 9일~2월 28일) 감차했던 버스 96대가 원상복귀한 3월에는 더 많은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난 버스 외에도 승·하차 시 많게는 한 번에 15명 가량이 오르내리면서 도로 위에 버스가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대책 마련은 커녕 출근시간대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허락해 출근길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남구 백운광장-대성초교 구간)에서는 출근시간대 전선 혼선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가지치기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들은 ‘안그래도 출근길 막히는 시간인데 차로 한계를 막고 가지치기를 해 교통 흐름을 더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 작업을 한계 맞으며 담당 업체를 교육하고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헌법적 책무 못 지킨 대통령 물러나야”

양금덕 할머니 등 굴욕 외교 규탄

“최악의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헌법적 책무를 지키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일 전국 각지에서 ‘매국·빈손 외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을 포함한 40개 단체와 양 할머니는 21일 광주시의회 앞 소녀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해국에 책임 하나 묻지 않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할머니와 단체는 한일회담 결과에 대해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탄핵사유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일제 전반기 업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전반기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국인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대표는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당사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돈을 받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받아야 한다.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제3차 면제안을 명백히 거부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을 위한 현수막 달기 모금운동이 24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대학생 1000명 서명운동이 21일 시작했다. 또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지난 20일 전주에서 정권 퇴진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매주 전국 순회 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21일 광주시의회 앞 소녀상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극단적 선택 위장 10년 도피...취업 사기범 징역형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위장해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선로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 4명에게 8회에 걸쳐 총 2억

9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 중 한명이 시민사회단체 집행부로 있어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체포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하던 렌트카를 바다에 추락시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고 도주해 9년간 잠적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은 지난해 A씨의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공소시효를 12일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여직원 오피스텔 무단침입 전남도 사무관 ‘직위해제’

전남도청의 한 사무관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여성 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가 직위해제됐다.

전남도는 21일 팀장급 사무관 남성 A씨를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같이 술을 마시던 B씨가 가방을 놓고 귀가하자, “가방을 전달하겠다”며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지난해부터 같은 팀에 근무하게 되면서, A씨와의 분리를 요구하며 오피스텔 무단 침입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A씨가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 농기계 교통사고 3년 235건 ‘전국 최다’

전남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019년 98건, 2020년 63건, 2021년 74건 등 지난 3년 동안 총 235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총 36명이 사망하고 261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전국 농기계 사고는 총 1175건 발생했는데, 전남이 전국 사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이 21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남 151건, 경남 135건, 경기 118건, 충북 110건, 전북 81건, 강원 58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전남 지역이 고령인구 비율 25%로 전국 평균(17.9%)을 웃도는데다 농촌 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아 농기계 사고도 더 자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일 인하대학교, 다하시스템즈와 함께 전남도 농기계 동차센터기반 경광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운기 등에 자외선센서를 장착해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광등을 켜 주의를 환기하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범열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도로상에서 야간에 운행되는 농기계는 시인성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기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는 제품개발로 전남지역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